

행정학

해설위원 : 김덕관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③	③	①	④	①	④	①	④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④	②	②	③	②	②	③	②

▶ 출제영역 분포

단원	문제수	단원	문제수
행정학총론	3	재무이론	2
정책이론	4	행정환류	-
조직이론	4	지방자치론	3
인사이론	4		

▶ 문제분류 및 실력진단기준

기출문제	17	생소한 문제	2	100점 방지	1
------	----	--------	---	---------	---



실질적인 만점: 95점
고득점: 90점 이상
분발대상: 75점 이하

▶ 총평

이번 시험은 90점 이상은 되어야 고득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출제되었고, 특히 17문제는 매년 출제됐던 출제포인트가 그대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문제는 생소한 내용이 섞여 있지만, 기출문제에 있던 것을 소거하고 모든 강의에서 제가 알려준 생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요령을 적용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95점은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1문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비하기도 어렵고 풀기도 어려웠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100점은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그래도 90점 이상은 되어야 고득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출문제는 여태까지의 모든 기출문제가 아니라 단원별 기출문제집인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1700문제 정도의 기출문제(이하 '기출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즉, 누구나 충분히 대비가능한 기출문제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90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90점이 쉽다는 건 아닙니다. 기출문제를 1~2번 본다고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반복훈련을 통해 점차 90점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 공부기간이 짧아 반복훈련이 부족하여 점수가 부족한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험문제와 상관없는 엉뚱한 것을 반복하면, 이 정도 시험에서 죽어도 80점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시험에서 80점 미만이면 그동안 잘못 공부한 겁니다. "시험문제로 안 나오는 것" 혹은 "시험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 당연히 시험문제가 안 풀리고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가르쳐주는 그대로, 객관식 행정학 시험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공부하면, 공부하는 족족 점수가 올라갑니다. 저는 그저 시험문제로 나오는 그대로 가르쳐줄 뿐이니, 제가 하라

는 그대로 하면 무조건 합격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한 합격생들의 합격후기에 공통적으로 '시험장에서 덕관쌤 목소리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었다'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해설 강의에서 이번 시험문제를 일일이 기존 기출문제와 비교해주고 철저하게 시험에서 합격하는 공부방향을 잡아줍니다. 이번에 점수가 아쉬웠던 분들은 꼭 해설 강의를 보고! 제가 하라는 그대로 공부하면! 내년 시험은 넉넉하게 합격합니다.

▶ 문제 및 해설

Point 10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1. 직위분류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특정 직무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 대상으로 한다.
-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반영한 직무급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 ③ 개방형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공직 내부에서 수평적 이동 시 인사배치의 유연함과 신축성이 있다.
- ④ 조직개편이나 직무의 불필요성 등으로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경우, 그 직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대상이 된다.

<암기용 해설>

③ 개방형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공직 내부에서 수평적 이동 시 인사배치의 유연함과 신축성이 있다.

▶ 수평적 이동 곤란 ⇨ 인사배치의 유연성·신축성이 낮음

<이해용 해설>

- ① (○) 직위분류제는 전문행정가주의에 따라 특정 직무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해당 직무만 수행하도록 한다.
- ② (○) 직위분류제에서는 종류 및 난이도·책임도에 따라 직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직무, 동일 보수' 원칙을 반영한 직무급 보수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 ③ (×) 계급제는 일반행정가주의에 따라 공무원이 다양한 직무를 두루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직무의 종류나 성격에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여 인사배치의 유연성과 신축성이 높다. 반면에 직위분류제는 특정 직무에 대한 전문가를 임용하여 한 직무만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수평적 이동이 곤란하여 인사배치의 유연성과 신축성이 낮다.
- ④ (○) 직위분류제는 특정 직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직무의 전문가를 임용하는 직무 중심 공직분류 체계이다. 따라서 직무 자체가 없어지면 직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대상이 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987번(2022 국회8급, 2004 국가9급)]

계급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⑤ 담당할 직무와 관계없이 인사배치를 할 수 있어 인사배치의 신축성·융통성을 기할 수 있다.

[기출에강한행정학 987번 관련틀린선지(2011 국가9급)]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조직 내에서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여 유연한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Point 030 공공서비스의 유형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문 2. 사바스(Savas)의 재화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재(private goods)는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안전을 위해 행정의 개입도 가능하다.
- ② 공유재(common pool goods)는 과다 소비와 공급 비용 귀착문제가 발생한다.
- ③ 요금재(toll goods)는 X-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공급한다.
- ④ 집합재(collective goods)는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암기용 해설>

③ 요금재(toll goods)는 ~~X-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공급한다.

▶ 요금재: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 문제가 발생

<이해용 해설>

- ① (○) 시장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진 재화이다. 따라서 주로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시장에서 공급된다. 하지만 시장메커니즘에서는 보장되기 어려운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안전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 (○) 공유재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이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개인들은 공유재를 최대한 많은 양을 소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고갈되어 버리는 ‘공유재의 비극’이 초래된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공급을 위한 공급비용 부담 규칙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규제 장치가 요구된다.
- ③ (X) 요금재는 X-비효율성과는 관계없고,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 문제가 발생하는 재화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독점 문제가 심각할 경우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규제한다.
- ④ (○) 공공재(집합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이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면 비용부담 없이 사용하려는 무임승차(free-riding) 문제가 발생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262번(2013 전환특채)]

재화의 유형별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재화> <특징> <문제점>
- ② 공유재 - 경합성과 비배제성 - 고갈사태
- ③ 공공재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 무임승차
- ④ 유료재 - 비경합성과 배제성 - 자연독점

Point 029 수단적 이념 : 가외성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3.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외성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
- ② 공익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 ③ 기계적 효율성은 행정의 사회목적 실현과 다차원적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 ④ 수평적 형평성은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원칙으로, 실적과 능력의 차이로 인한 상이한 배분을 용인한다.

<Tip>

선지 ②는 어떤 견해에 따르든 어차피 틀린 선지입니다. ‘사익의 총합’ 즉, 공리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모든 강의/교재에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배웠죠?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암기용 해설>

- ② 공익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 ▶ 실체설의 공익: 사익을 초월한 사회전체의 절대적·보편적 가치
- ③ 기계적 효율성은 행정의 사회목적 실현과 다차원적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 ▶ 사회적 효율성
- ④ 수평적 형평성은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원칙으로, 실적과 능력의 차이로 인한 상이한 배분을 용인한다.
- ▶ 수직적 형평성

<이해용 해설>

- ① (○) 가외성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복이나 여분을 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
- ② (X)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입장은 과정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정설에 대해 과거에는 ‘사익의 총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사익의 총합’은 공리설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과 달리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한 사회전체의 절대적·보편적 가치를 공익으로 본다.
- ③ (X) 사회목적 실현과 다원적인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 등을 포함하는 효율성은 사회적 효율성이다. 이는 투입과 산출에 있어 바람직한 가치 구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계적 효율성은 투입과 산출에 있어 물리적·금전적 측면만 고려하는 개념이다.
- ④ (X)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이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226번(2019 서울9급)]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정설은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 ③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조정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기출에강한행정학 251번(2010 국회9급)]

기계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사회적 효율성은 사회목적 실현과 다원적인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을 내용으로 한다.

[기출에강한행정학 241번 관련틀린선지(2021 군무원9급)]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Point 008 행태론과 후기행태론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4. 다음 글의 저자와 그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격언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의 하나는, 예를 들어 “뛰기 전에 살펴라”라는 격언과 “지체하는 자는 진다”라는 격언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모순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언과 같이 기존 행정학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원리는 상호모순성이 많다.

- ① 윌슨(Wilson)은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확립하려고 했다.
- ②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순환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 ③ 굿노(Goodnow)는 정치를 국가의지의 표명으로, 행정을 국가의지의 집행으로 정의했다.
- ④ 사이먼(Simon)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 사실만을 다루는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을 주장했다.

<암기용 해설>

④ 행정관리론(원리주의)의 원리는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 사이먼

<이해용 해설>

④ 사이먼(Simon)은 행정관리론(원리주의)의 연구는 과학적 방법과 거리가 있으며 행정관리론의 행정원리들은 원리(principle)가 아니라 과학적인 증명을 거치지 않은 “격언(proverb)”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사이먼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 사실만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과학으로서 행정학을 주장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84번(2015 해경간부, 2011 국회8급)]

행정학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이먼(H.Simon)은 행정관리론에서 개발된 전문화의 원리, 명령 통일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등은 상호간에 모순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리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verb)에 불과하다고 논박하였다.

Point 141 예산편성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5. 「국가재정법」상 (가)에 해당하는 기관만을 모두 고르면?

정부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부가 (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ㄱ. 헌법재판소
- 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ㄷ. 국민권익위원회
- ㄹ. 국가인권위원회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암기용 해설>

ㄷ. 국민권익위원회
ㄹ. 국가인권위원회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이해용 해설>

ㄱ (○), ㄴ (○), ㄷ (X), ㄹ (X)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417번(2007 국가7급)]

국가재정법상 예산편성시 정부가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 ① 감사원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③ 국회
- ④ 공정거래위원회

Point 086 공공기관

[100점 방지] 중요도 없음, 난이도 상

문 6. 공공기관 기업지배구조의 이념형적 모델인 주주(shareholder) 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주 자본주의 모델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보며,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경영목표이다.
- ② 주주 자본주의 모델의 기업규율방식에는 이사회 경영감시, 시장에 의한 규율 등이 있다.
- ③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기업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며, 이해관계자의 이익 극대화가 경영목표이다.
- ④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종업원 지주제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단기 업적주의를 추구한다.

<Tip>

행정학 시험에 출제되기에는 부적합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대비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까지 공부하면, 정작 시험에 훨씬 출제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반복할 수가 없어 “무조건 점수가 떨어집니다”. 앞으로도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암기용 해설>

④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종업원 지주제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단기 업적주의를 추구한다.

▶ 주주 자본주의 모델

<이해용 해설>

- ① (○), 주주 자본주의 모델은 기업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기업의 주인이라고 보고,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경영목표로 삼는 것을 말한다.
- ② (○) 주주 자본주의 모델의 기업규율은 주주들이 선출한 이사회 경영감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규율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의 기업규율은 조직 자체에 의한 통제, 주거래은행의 경영감시 및 통제, 이해관계자의 경영 참여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③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기업을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이해관계자들 전부의 이익 극대화를 경영목표로 삼는 것을 말한다.
- ④ (X) 근로자의 경영 참여가 주식을 보유한 종업원만 참여할 수 있는 종업원 지주제도, 주식을 보유한 연금펀드를 통한 지분 참여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주주들의 단기적 이익을 추구(단기 업적주의)하는 것은 주주 자본주의 모델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근로자의 경영 참여가 이사회를 통한 모든 근로자의 참여, 모든 근로자의 공동결정제도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전체 이익과 장기적 성장을 추구한다.

Point 171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상

문 7.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주민투표법」으로 정하고 있다.
- ②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지출에 관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이 가능하며, 이 제도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 ④ 주민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된다.

<암기용 해설>

②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주민감사청구: 시·도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청구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지출에 관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이 가능하며, 이 제도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 주민소송: 2006년에 도입

④ 주민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된다.

▶ 주민소환 대상: 단체장 및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이해용 해설>

- ① (○) 주민투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의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민투표법」으로 정하고 있다.
- ② (X) 주민감사청구는 시·도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그리고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청구한다.
- ③ (X) 주민소송은 2006년에 도입된 것으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시행)으로 처음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 ④ (X)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가능하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765번(2006 국가9급)]

우리나라의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그리고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다.

[기출에강한행정학 1762번 관련틀린선지(2013 교행9급)]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민참여제도와 관련하여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조례제정개폐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참여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주민소송제도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기출에강한행정학 1780번(2015 서울9급)]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Point 090 동기부여 : 과정이론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8.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하위단계에서 상위 단계로의 욕구단계 이동뿐만 아니라 욕구 좌절 시 회귀적이고 하향적인 욕구단계로의 이동도 가능하다고 본다.
- ② 허츠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은 종업원의 직무 환경 개선과 창의적 업무 할당을 통한 직무성취감 증대가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본다.
- ③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은 인식된 불공정성이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노력, 성과, 보상, 만족, 환류로 이어지는 동기부여 과정을 제시하면서 노력-성과 간 관계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역할 인지를 강조했다.

<Tip>

선지 ④가 바로 포터와 롤러의 업적(성과)-만족 이론이라는 게 안 보였다 하더라도, 모든 강의/교재에서도 배우고 기출문제에도 있는 선지 ①, ②, ③을 소거하여 정답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암기용 해설>

-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노력, 성과, 보상, 만족, 환류로 이어지는 동기부여 과정을 제시하면서 노력-성과 간 관계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역할 인지를 강조했다.
- ▶ 업적(성과) → 보상 → 만족: 포터와 롤러의 업적(성과)-만족 이론

<이해용 해설>

- ① (○)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은 하위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순차적으로 발로된다는 ‘만족-진행’ 경로만 주장하였다.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이를 보완하여 욕구의 순차적 발로뿐만 아니라 상위욕구의 좌절로 인한 하위욕구로의 퇴행이라는 ‘좌절-퇴행’ 경로도 제시하였다.
- ② (○) 허츠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론(2요인이론)은 직무환경과 같은 위생요인과 직무성취감과 같은 동기요인이 완전히 별개로 작용한다고 본다. 위생요인의 충족은 불만족을 방지해줄 뿐 동기부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동기요인이 충족되어야 동기부여된다고 본다.
- ③ (○) 아담스(Adams)의 형평성(공정성)이론은 자기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의 비율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불형평(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 ④ (X) 노력, 업적(성과), 보상, 만족, 환류로 이어지는 동기부여 과정을 제시한 것은 포터(Porter)와 롤러(Lawler)의 업적(성과)-만족 이론이다. 이는 업적(성과)이 만족에 선행한다고 보고, 업적(성과)이 만족으로 연결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동기부여된다고 본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833번(2010 국가7급)]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Alderfer의 ERG이론은 Maslow와는 달리 순차적인 욕구발로뿐만 아니라 욕구좌절로 인한 욕구발로의 후진적·하향적 퇴행을 제시하고 있다.

[기출에강한행정학 843번(2017 경찰승진, 2011 경찰간부)]

허츠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허츠버그(Herzberg)는 조직구성원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요인은 상호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③ 동기요인이란 만족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직무 그 자체이며 위생요인은 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서 직무의 환경과 관련된 것이다.

[기출에강한행정학 862번(2021, 2014 국가9급)]

조직구성원들의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㉔. 형평이론 : 아담스(J. Adams)는 자기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Point 164 광역행정과 분쟁조정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9.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며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며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Tip>

현실적으로 선지 ②의 규정까지 모두 암기하긴 어렵습니다. 실전에서는 모르는 선지가 있으면 건너뛰고 다른 선지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것 알고 있죠? 이 문제도 선지 ②의 규정에 대해 몰랐다 하더라도 모든 강의/교재에서 배우는 선지 ③을 정답으로 바로 고르면 됩니다.

<암기용 해설>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며 시·도의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시·도 내 시·군·구 간 분쟁조정

<이해용 해설>

- ① (○)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 ② (○)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을 때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③ (X), ④ (○) 시·도별로 설치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같은 시·도 내 시·군·구 간 분쟁을 조정한다. 그 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689번(2008 지방7급)]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조정결정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④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Point 094 조직문화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중

문 10. 조직문화 및 변동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퀴(Quinn)은 경쟁가치모형을 활용해 ‘내부지향-외부지향’과 ‘유연성-통제(안정성)’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4가지 조직문화 유형을 도출하였다.
- ㄴ. 홉스테드(Hofstede)는 ‘권력거리’의 크기가 큰 문화에서는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된 경우가 많다고 본다.
- ㄷ. 레빈(Lewin)은 조직 변화의 과정을 현재 상태에 대한 해빙(unfreezing), 원하는 상태로의 변화(moving), 새로운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동결(refreezing)하는 3단계로 제시하였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Tip>

생소한 이론인 레빈의 조직 변화과정이 함께 출제되었지만, 모든 강의/교재에서도 배우고 기출문제에도 있는 선지 ㄱ, ㄴ에 대한 OX를 판단할 수 있으면 정답률이 50%가 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선지 ㄷ에서 기출문제의 출제패턴상 ‘해빙’, ‘변화’, ‘재동결’ 개념이 설명에 맞게 들어갔지만 구분하면 되는데, 이론을 몰라도 용어의 이름풀이만 해도 적절하게 쓰였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암기용 해설>

- ㄴ. 홉스테드(Hofstede)는 ‘권력거리’의 크기가 큰 문화에서는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된 경우가 많다고 본다.
- ▶ 권력거리가 작은 문화

<이해용 해설>

- ㄱ (○) 퀴(Quinn)과 로보그(Rohrbaugh)의 경쟁가치모형은 초점이 내부(구성원) 지향인지 외부(조직발전) 지향인지와 유연성인지 통제(안정성)인지에 따라 합리적목표모형, 내부과정모형, 개방체제모형, 인간관계모형과 각 모형별 문화를 제시하였다.
- ㄴ (X)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차원에서 권력거리 지수는 사회가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권력거리가 작은 문화에서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고, 이에 따라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된 경우가 많다.
- ㄷ (○) 레빈(Lewin)의 3단계 조직변화 모형의 3단계는 현재 상태를 해빙시키고, 원하는 상태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동결시키는 것이다.

Point 112 근무성적평정제도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 다수의 평정요소와 평정요소별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으로 구성
- 평정요소별 해당 등급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 대상자 평가
- 평정요소와 평정등급에 대한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

-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
- ② 가감점수법
- ③ 서열법
- ④ 체크리스트 평정법

<암기용 해설>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 평정자가 평정요소별 등급 표시 ⇨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

<이해용 해설>

① 다수의 평정요소와 평정요소별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으로 구성하고, 평정자가 직관과 선험에 근거하여 평정요소별로 평정대상자에게 해당되는 등급에 표시하는 방법은 도표식 평정척도법이다. 이는 평정자의 직관과 선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평정요소와 평정등급에 대한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093번(2005 서울7급)]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중 평정요소의 비합리성 문제, 연쇄효과(Halo effect) 등의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은?

- ③ 도표식평정척도법

Point 074 거시조직이론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12. 현대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을 환경적 결정에 피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본다.
- ② 조직군생태론은 조직을 외부 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피동적인 존재로 보고, 조직의 발전이나 소멸의 원인을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도에서 찾는다.
- ③ 혼돈이론은 조직이라는 복잡한 체제의 총체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잡한 현상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인다.
-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기술, 규모, 환경 등의 다양한 상황요인에 대한 조직적합성을 발견함으로써, 모든 상황에 적합하고 유일한 최선의 조직설계와 관리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암기용 해설>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기술, 규모, 환경 등의 다양한 상황요인에 대한 조직적합성을 발견함으로써, 모든 상황에 적합하고 유일한 최선의 조직설계의 관리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구조적 상황론(상황론적 조직이론): 모든 상황에 적합한 조직은 없음

<이해용 해설>

- ① (○) 자원의존이론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처한다고 보는 임의론적 관점의 이론이다. 따라서 조직은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존재이다.
- ② (○) 조직군생태학 이론은 조직의 변화는 외부환경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극단적인 환경결정론적 관점이다. 따라서 조직은 환경에 대한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조직의 발전이나 소멸의 원인을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합도에서 찾는다.
- ③ (○) 혼돈이론은 조직은 무질서하고 불안정한 혼돈 상태에서 조직 속에 숨어 있는 질서를 발견하여 학습해나간다고 본다. 이는 조직이라는 복잡한 체제의 총체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잡한 체제 자체에 대한 통합적 연구이기 때문에 현실의 개별조직에 대한 처방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④ (X) 구조적 상황론(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없다고 전제한다. 효과적인 조직구조와 관리방법은 기술, 규모, 환경 등 다양한 상황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694번 관련틀린선지(2021 지방9급, 2018 국가9급)]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Point 110 임용의 유형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상

문 13. 공무원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임용시험 성적과 임용 후 근무성적 간의 연관성이 높다면 임용시험의 기준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④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Tip>

공무원 인사에 대한 모든 규정을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모든 강의/교재에서도 배우고 기출문제에도 있는 선지 ②, ③은 소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에서 요령을 배웠듯이, 대부분의 인사규정에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선지 ①, ④ 중에서는 시보 임용 기간에 대한 예외가 전혀 없는 것처럼 서술한 선지 ④가 틀린 선지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암기용 해설>

- ④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 ▶ 예외적으로 시보 임용 면제 또는 기간 단축 가능

<이해용 해설>

- ② (○) 기준 타당성은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이 직무수행능력(근무성적)도 높은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임용시험 성적과 임용 후 근무성적 간의 연관성이 높다면 임용시험의 기준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③ (○) 우리나라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 ④ (×) 시보 임용은 5급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Point 122 우리나라 공직윤리 확보제도

[기출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중

문 14. 공직윤리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 ② 지방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하였다.
- ④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의무자 모두가 등록재산 공개대상은 아니다.

<Tip>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의무와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의 의무는 같습니다.

<암기용 해설>

- ② 지방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 필요

<이해용 해설>

- ② (×)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방지, 재산등록, 재산공개, 주식백지신탁, 선물의 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 ④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중 상위직 일부만 재산공개 의무자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211번 관련틀린선지(2022 경찰간부)]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 이해충돌 방지 의무

[기출에강한행정학 1213번 관련틀린선지(2020 국가7급)]

우리나라의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공무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기출에강한행정학 1216번(2013 국회8급)]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Point 169 지방재정력 평가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15.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의 비(比)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 ②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 합계액의 비를 의미하며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의 적용기준으로 활용된다.
- ③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의 비를 의미하며 기본적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④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방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 수로 나눈 것으로 세입구조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암기용 해설>

②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 합계액의 비를 의미하며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의 적용기준으로 활용된다.

▶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일반재원의 비중
보통교부세 교부 기준: 재정력 지수

<이해용 해설>

- ① (○)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는 자주재원의 비율만 고려하므로 의존재원까지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가능한 실질적인 재정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 ② (×)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일반재원(자주재원+지방교부세)의 비중을 의미한다.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의 기준이 되는 건 재정력지수이다.
- ③ (○)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만큼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④ (○)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지방세액을 주민 수로 나눈 것이다. 이는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세입구조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747번(2001 입법고시)]

지방재정자립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총액에서 점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 ② 재정자립도 개념에 의하면 구성비가 유사할 경우 재정력이 유사하다고 간주해 버리는 오류를 낳게 된다.
- ③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같거나 유사하다고 해서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같은 것은 아니다.
- ④ 지방재정자립도 개념에는 자치단체의 개정규모를 반영하고 있다.

Point 142 예산심의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16.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암기용 해설>

③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 예산심의 절차: 시정연설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이해용 해설>

③ (×) 우리나라 예산심의 절차는 시정연설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순서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425번(2013 경찰승진, 2009 국가9급)]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상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의 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Point 050 정책대안의 탐색과 결과예측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문 17. 정책대안의 탐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거 또는 현재의 정책을 참고로 하거나 외국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한 정책들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은 점증주의적 접근에 해당한다.
- ② 다른 정부의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는 가급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이질적인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주관적·직관적 판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가 있으며 이들은 대안의 개발뿐만 아니라 대안의 결과예측에서도 활용된다.
- ④ 브레인스토밍은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하게 제안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활동이다.

<암기용 해설>

- ② 다른 정부의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는 가급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이질적인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정책대안으로 사회문화적 배경이 동질적인 지역의 정책을 고려

<이해용 해설>

- ① (○) 자국이든 외국이든 자기 지방자치단체든 다른 지방자치단체든 과거 또는 현재의 정책을 고려하는 것은 기존 대안을 바탕으로 소폭 수정하는 보수적인 결정이 나타나는 점증주의적 접근에 해당한다.
- ② (×) 정책대안으로 다른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동질적인 지역의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509번(2006 선관위9급)]

점증주의(incrementalism)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결정자가 분석력 및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출에강한행정학 453번(2022 국회8급, 2013, 2011 국회9급)]

W.N.Dunn은 예측의 기법을 연장적 예측, 이론적 예측, 직관적 예측으로 분류하였다. <보기>에서 이론적 예측 기법은 모두 몇 개인가?

- 브레인스토밍

[기출에강한행정학 462번(2009 국회8급)]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이 풍부할 때 유용한 객관적 정책분석 방법이다.
- ②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집단토론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아이디어의 대안들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법이다.

Point 039 정책의 유형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18. 정책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로위(Lowi)의 분배정책은 돈이나 권력 등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다.
- ②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보호적 규제 정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통제하는 정책이다.
- ③ 아몬드(Almond)와 파월(Powell)의 상징정책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이다.
- ④ 로위(Lowi)가 제시한 정책유형론은 포괄성과 상호배타성을 확보하고 있다.

<암기용 해설>

- ① 로위(Lowi)의 분배정책은 돈이나 권력 등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다.
- ▶ 재분배정책
- ③ 아몬드(Almond)와 파월(Powell)의 상징정책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이다.
- ▶ 추출정책
- ④ 로위(Lowi)가 제시한 정책유형론은 포괄성과 상호배타성을 확보하고 있다.
- ▶ 어떤 유형 분류든 포괄성과 상호배타성에서 한계가 있음

<이해용 해설>

- ① (×) 돈이나 권력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가진 자로부터 못 가진 자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정책은 재분배정책이다.
- ② (○) 보호적 규제정책은 일반국민이나 특정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 집단에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 ③ (×) 정부체제를 유지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추출정책이다.
- ④ (×) 정책유형 분류에서 포괄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정책유형을 포괄하는 정도를 말하고, 상호배타성은 정책유형들 간 겹치는 특징이 없도록 구분하는 정도를 말한다. 로위(Lowi)의 정책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정책유형 분류는 포괄성과 상호배타성을 완전히 확보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352번(2018 지방7급)]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소비자나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집행 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Point 067 정책평가방법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19. 정책평가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후적 비교집단 구성(비동질적집단 사후측정설계)은 선정효과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 ② 진실험은 모방효과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 ③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는 진실험과 같은 수준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진실험과 준실험을 비교하면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는 준실험이, 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진실험이 더 우수하다.

<Tip>

선지 ②에서 진실험은 내적 타당성이 가장 높는데, 왜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지 고민하면 안 됩니다.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중에서 내적 타당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지, 당연히 여러 요인에 의해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암기용 해설>

③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는 진실험과 같은 수준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 준실험 설계방법 ⇨ 진실험보다 내적 타당성이 낮음

<이해용 해설>

- ① (○) 비동질적 집단 사후측정설계 등 준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원이 동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선발효과(선정효과)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다.
- ② (○) 진실험이든 준실험이든 통제집단이 실험집단을 모방하는 모방효과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다.
- ③ (X), ④ (○) 내적 타당성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완전히 확보한 이상적인 실험환경을 갖춘 진실험이 가장 높다.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는 준실험 설계방법 중 하나로, 진실험보다는 내적 타당성이 낮다. 외적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은 일반적인 사회환경과 달리 이상적인 실험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실험인 진실험이 가장 낮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626번(2009 군무원9급)]

실험적 정책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준실험적 평가방법은 진실험적 평가 방법에 비해 내적타당도가 높다.

[기출에강한행정학 629번(2020 지방7급)]

정책평가를 위한 조사설계의 유형 중 진실험설계(true experimental design)에 해당하는 것은?

- ③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Point 069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20.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 국무총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암기용 해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가 실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실시

④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 국무총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합동평가: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합동으로 실시

<이해용 해설>

① (X)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재평가는 국무총리가 실시한다.

③ (X)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실시한다.

④ (X)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648번(2013 국회8급)]

다음 중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